영남일보 The Yeongnam Ilbo
2007년 03월 09일 004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8일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제통합' 조례 제정 속도차

대구시·경북도의회 간담회

道 "주민들 공감대 형성 아직…"

市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놓고…"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8일 안동에서 간담회를 열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 소속 시의원 6명은 이날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 의원 6명과 경제통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대구시의원들은 우선 시·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추진위를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 북부지역 의원들은 경제통합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대구 중심의 경제통합 반대"

도의회 의원들은 대구 중심의 경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경구 의원(안동)은 "지역민들은 우선 '통합'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협력'이 바람직하다"며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구·경북 경제통합으로 북부경제권이 대구경제권에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 사이에 경제통합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용 의원(영양)은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현재 수도권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을 하면 당연히 대구에 자본이 몰리게 될 것이므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소외감은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부지역 도의원들은 "지난해 선정한 19개 공동 추진과제에도 북부지역을 배려한 과제는 전혀 없었다"며 경제통합에 따른 성과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진현 의원(영덕)은 "예산을 절감하고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야 한다"며 "경제통합을 통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에게 비전을 적극 제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로 입장 이해하는 계기"

이에 반해 대구시의원들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다.

김덕란 의원은 "추진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부터 제정해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과제를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정규용 의원도 "경제통합은 대구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추진위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며 조례 제정에 대한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도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 성과 배분 등 낙후된 북부지역을 배려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고, 추진위에 시의원과 도의원이 함께 참여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술·이현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대구와 경북 북부지역 입장을 서로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시·도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협력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곤기자 kons@yeongnam.com